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2021. 10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구성

I. 재정여건

II. 재정건전성

III. 코로나19 재정기조 국제비교

IV. 재정위험 관리와 재정건전화 정책

(참고)V. 세입확충

I. 재정여건

2022년 예산안 재정총량

2022년 예산안: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

-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 규모가 8.3%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
- 총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으로 548.8조원으로 2021년 2차 추경 대비 6.7% 증가
- 국세수입 호조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4% 적자(통합재정수지적자 2.6%), 국가채무비율은 50.2% 예상

(단위: 조원, %)

	'21		'22안
	본예산	2회 추경	
◇ 총 수 입	482.6	514.6	548.8
(증가율)	(0.2)	(6.8)	(6.7*)
◇ 총 지 출	558.0	604.9	604.4
(증가율)	(8.9)	(18.1)	(8.3)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GDP대비, %)	(△3.7)	(△4.4)	(△2.6)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GDP대비, %)	(47.3)	(47.3)	(50.2)

* '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1년 2회 추경 대비

(단위 : 조원, %)

구 분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예산(추경)	'22년 예산
총 국 세	293.5	285.5	314.2	338.6
일반회계	286.0	276.3	304.6	328.6
특별회계	7.4	9.3	9.6	10.1

2022년 예산안 재정기조

연속 4년간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재정여력 급속 소진

-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은 경상성장률 4.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2019년 이후 연속하여 4년째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복
- 내년에도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경상성장률(4.2%)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것(7.8% 증가)으로 예측
- 2021년 6.2%에 달했던 관리재정수지적자가 내년에 4% 중반으로 하락한 것은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노력보다는 올해 초과세수와 내년의 세수 호조에 기인
- 낙관적인 전망에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선을 넘어선 지 단 2년 만에 다시 50%선으로 진입, 재정여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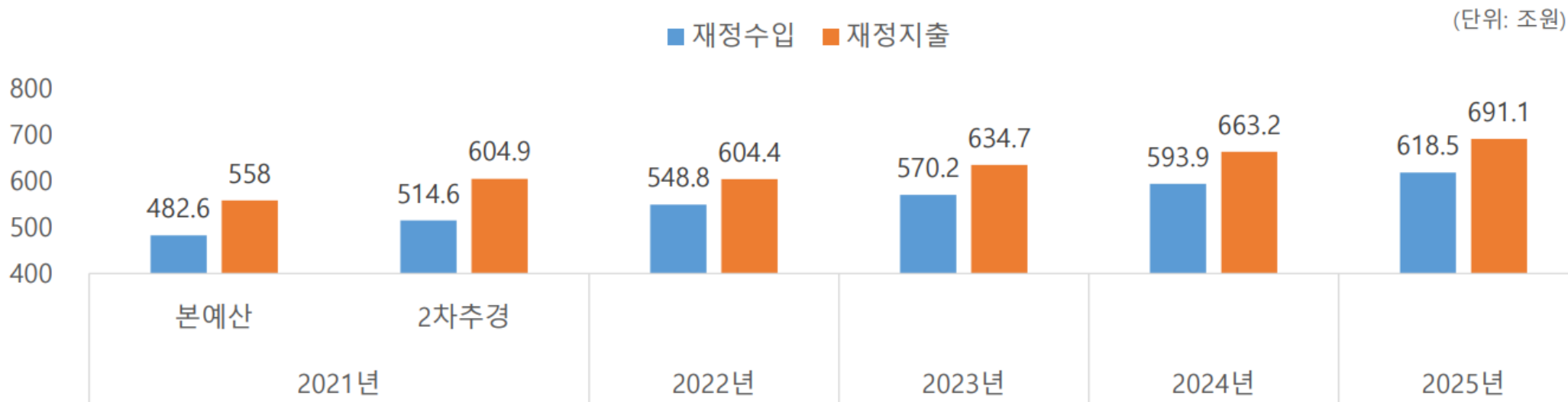
2021~25년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입: 경제회복과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향후 4년간 지속 증가 예상

(’21년 482.6조원 → ’25년 618.5조원, 연평균 **4.7%** 증가)

- (국세수입) 세계경제 회복으로 견조한 증가 예상(’21년 282.7조원 → ’25년 383.1조원, 연평균 **5.1%** 증가)
- (기금수입) 가입자 확대, 자산운용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21년 28.9조원 → ’25년 30.0조원, 연평균 **0.6%** 증가)
- (세외수입) 벌금수입 감소, 부담금 수입 증가 등 통상수준 유지(’21년 171.0조원 → ’25년 205.4조원, 연평균 **4.7%** 증가)

2021-2025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5년 중기재정전망

재정지출: '22년 확장적 재정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3년 이후부터 증가율 하향 조정,
'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4%초반) 증가(연평균 **5.5%** 증가)

- (의무지출) 복지분야 등 중심으로 지출 소요 확대('21년 266.1조원 → '25년 342.7조원, 연평균 **6.5%** 증가)
- (재량지출) 코로나극복과정의 지출은 단계적 정상화 등('21년 291.9조원 → '25년 348.4조원, 연평균 **4.5%** 증가)

2021-2025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재정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세외수입	28.9	29.3	26.7	27.4	28.4	30.0	0.6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9.9	197.7	205.4	4.7
재정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의무지출	266.1	279.1	301.1	311.7	327.0	342.7	6.5
(증가율)	(4.1)	(9.2)	(13.2)	(3.5)	(4.9)	(4.8)	
(비중)	(47.7)	(46.1)	(49.8)	(49.1)	(49.3)	(49.6)	
○재량지출	291.9	325.8	303.3	323.0	336.2	348.4	4.5
(증가율)	(13.8)	(27.0)	(3.9)	(6.5)	(4.1)	(3.6)	
(비중)	(52.3)	(53.9)	(50.2)	(50.9)	(50.7)	(50.4)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5년 중기재정전망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지난해 예상했던 수준보다 모두 감소

- (관리재정수지) '21년 6.2% 적자 → '22~'25년 4%대로 적자폭 축소
- (국가채무) 지속 증가하여 '21년 47.3% → '25년 58.8% 전망

2021-2025년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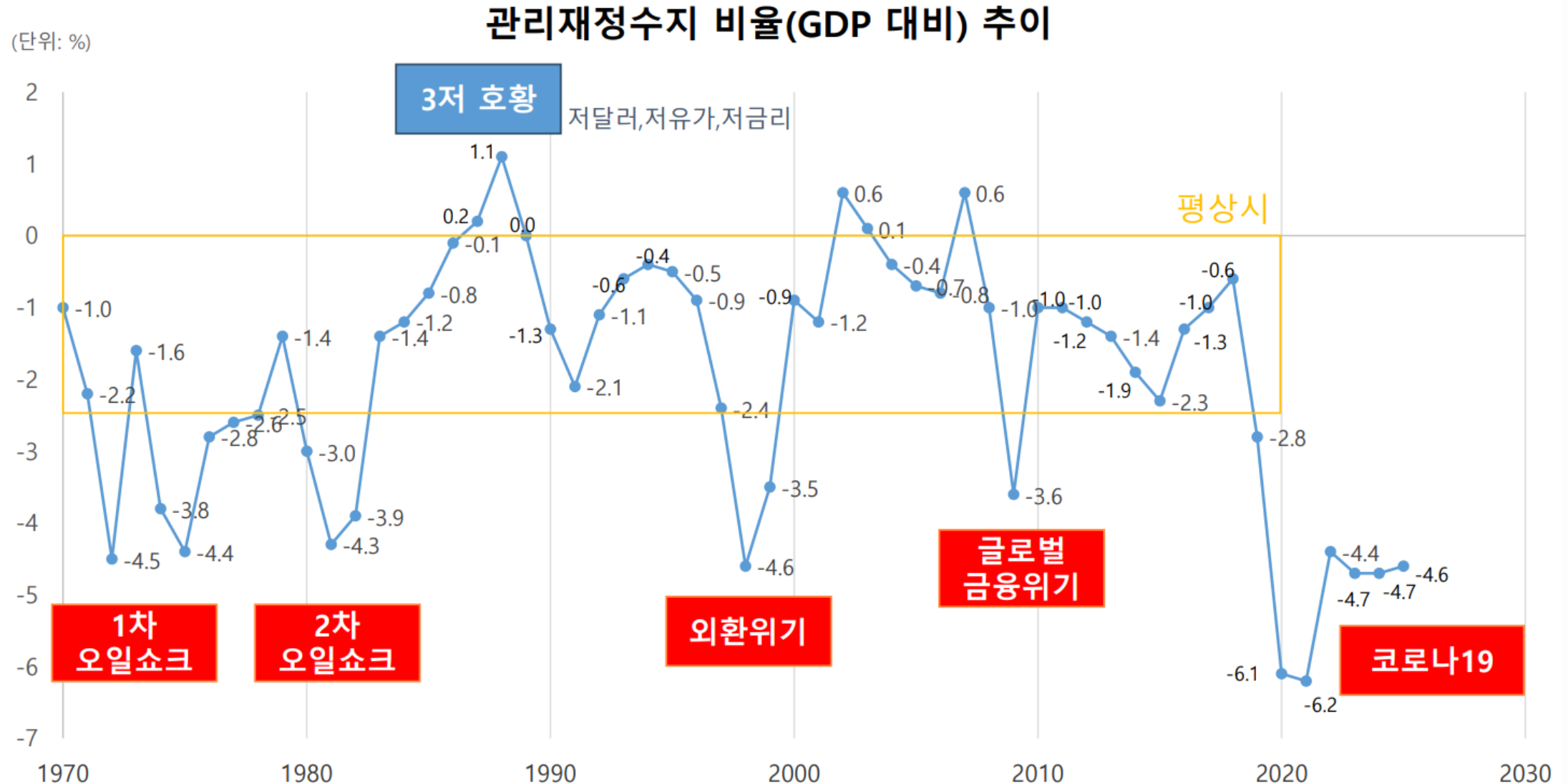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2차추경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GDP 대비, %)	-3.7	-4.4	-2.6	-2.9	-3.0	-3.0
◦ 관리재정수지	-112.5	-126.6	-94.7	-111.0	-108.4	-109.2
(GDP 대비, %)	-5.6	-6.2	-4.4	-4.7	-4.7	-4.6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 대비, %)	47.3	47.3	50.2	53.1	56.1	58.8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II. 재정건전성

관리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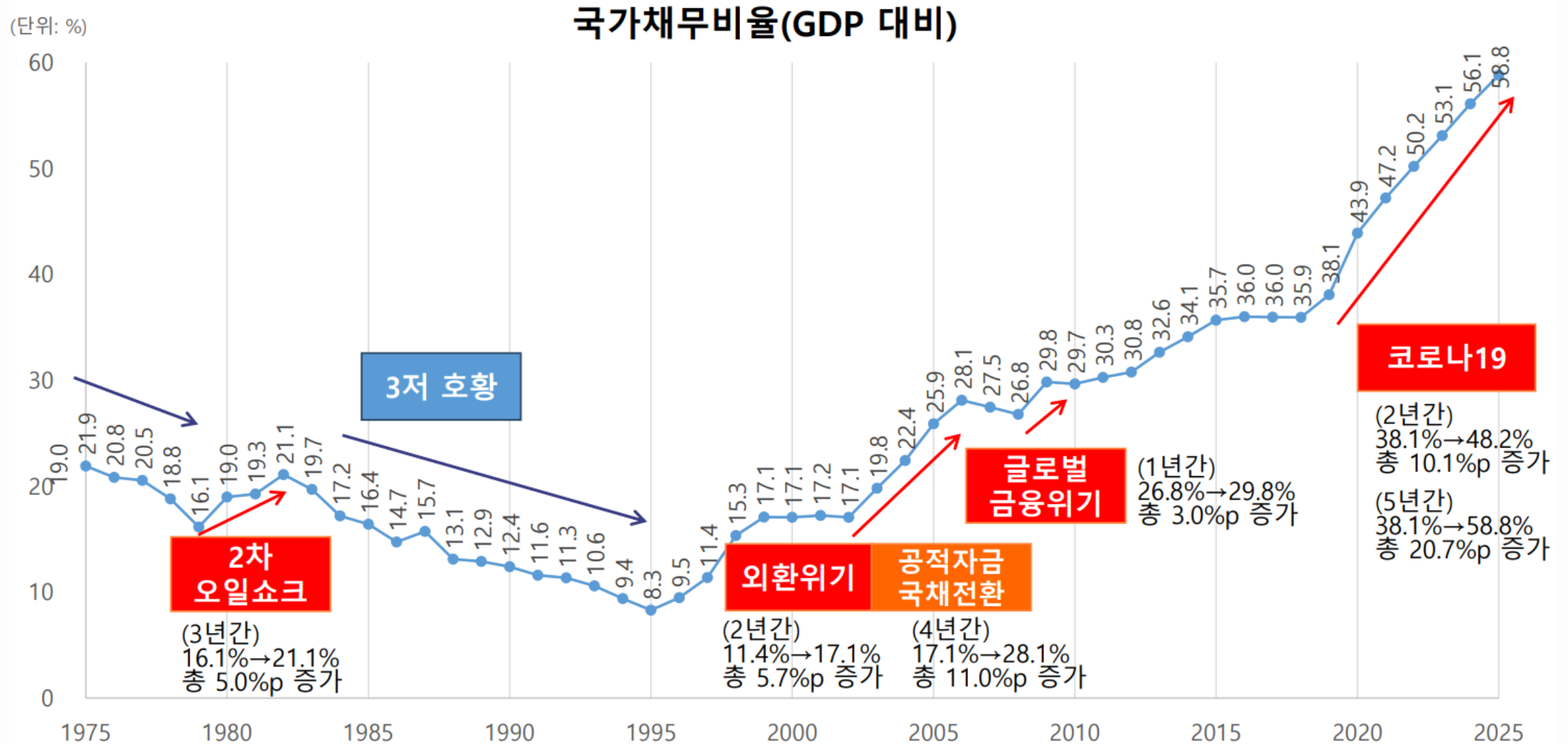
만성적인 재정적자

재정적자의 급속한 확대와 고착화

- 2019년부터 빠르게 늘어난 재정지출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확대재정 결과, '20년과 '21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이 GDP 대비 6%초반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수지적자('20년 6.1%, '21년 6.2% 재정수지적자)는 이 기간의 재정정책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확장적이었음을 의미
- 내년도 세수 호조에 대한 기대로, 6%의 적자 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이 4% 중반에 머물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

→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발생한 재정적자가 위기 종료 후 큰 폭으로 개선된(외환위기 -4.6% → -3.5% → -0.9%, 금융위기 -3.6% → -1.0% → -1.0%) 것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적자가 4년 이상 지속되어 고착화되는 특징 보임

국가채무비율 추이



국가채무 급증 현상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현상: 2019-2025년 6년간 채무비율 20.7%p 증가 예상(38.1% → 58.8%), 이는 외환위기 기간(1997-1999년)과 공적자금 국채 전환기(2002-2006년)의 6년간 채무비율 증가폭 16.7%p를 크게 상회

- 2018년 이후 계속된 재정수지적자의 누적으로 2018년 35.9%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1%, 2022년 50.2%로 급속히 늘어난 이후, 2025년에는 58.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코로나19 2년 동안에 국가채무비율이 10.1%p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기간의 증가폭을 크게 상회
 - ✓ 코로나19 2년간: 채무비율 38.1% → 48.2% 총 10.1%p 증가
- 2019-2025년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은 5.4%p는 외환위기 기간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기간 연평균 채무증가 속도(2.5%p)의 2배를 넘어선 수준
 - ✓ 코로나19 이후 6년간: 채무비율 38.1% → 58.8% 총 20.7%p 증가 예상

재정여건 악화 원인과 과제

19년 이후 급증한 재정지출이 대규모 재정적자의 근본원인

-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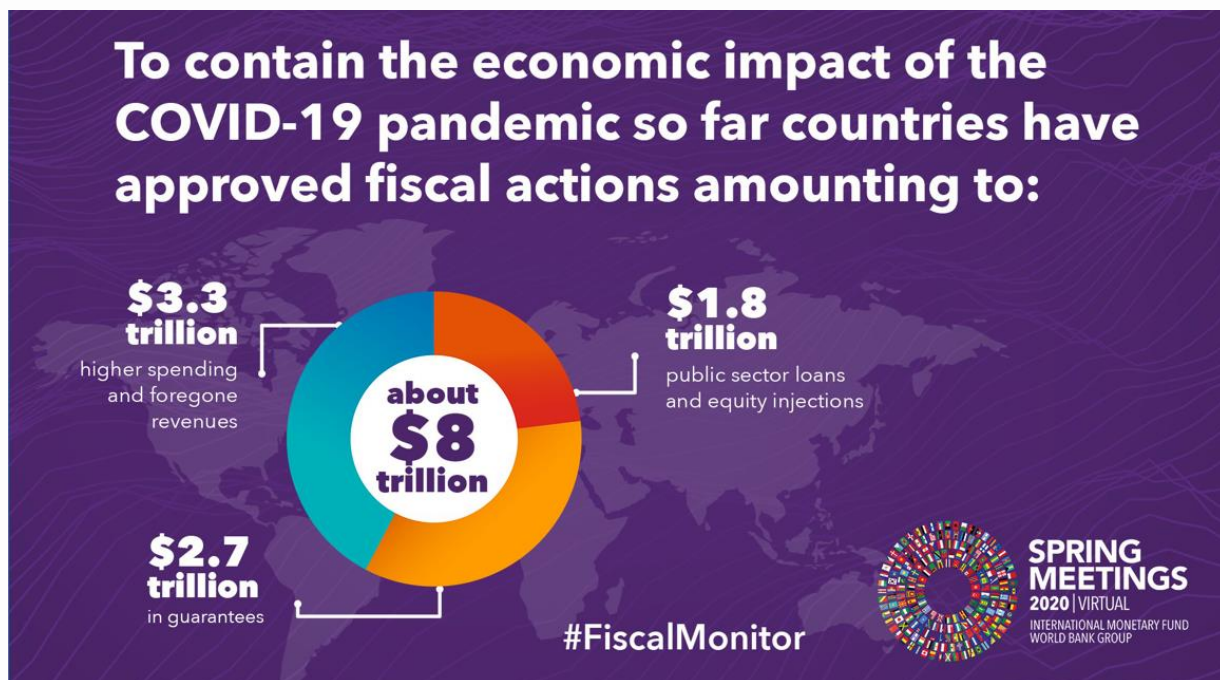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

III. 코로나19 이후 재정기조 국제비교

코로나 위기대응 재정 운용: 글로벌 동향

- 코로나 위기의 직접적 피해 대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 유지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적극 활용
- 실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 사례 조사 결과:
 - 1) 사업체에 대한 현금지원 2) 일자리 유지 지원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 투입

<위기초기 재정투입 규모>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 추이
(IMF 2020 Fiscal Monitor)

- '20. 4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8조 달러 재정**이 투입될 것 집계
- 5월 기준: 9조 달러 재정 투입 집계, 한달 새 1조 달러 증가
- 6월 기준: 약 11조 달러 (\$5.4조: 직접지원, \$5.4조: 간접지원)
- **9월 기준: 약 11.7조 달러**, 세계 GDP의 11.9%
\$5.8조: 직접(재정)지원 지출증대, 감세
\$5.9조: 간접(금융)지원 대출, 자본인수, 보증

국가별 재정대응

각국의 재정대응은 차입능력과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소득이 높은 선진경제국의 재정수지적자 비율(GDP 대비 -13.3%)이 신흥경제국(-10.3%)이나 저소득개발국(-5.7%)보다 더 커, 자원조달 여건이 양호한 나라들이 비상 상황에 직면하여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

(단위: %)

	Overall fiscal balance						Gross debt						
	2018	2019	Current		Difference from		2018	2019	Current		Difference from		
			Projections	2020	2021	October 2020 WEO			Projections	2020	2021	October 2020 WEO	Projections
World	-3.1	-3.8	-11.8	-8.5	0.8	-0.9	82.3	83.5	97.6	99.5	-1.1	-0.3	
Group of Twenty (G20)	-3.7	-4.5	-13.0	-9.4	0.9	-1.0	89.7	91.3	106.8	109.0	-1.0	-0.2	
Advanced Economies	-2.7	-3.3	-13.3	-8.8	1.1	-1.9	103.6	104.8	122.7	124.9	-2.8	-0.7	
Advanced G20	-3.3	-4.0	-14.3	-9.6	1.1	-2.1	111.2	112.7	132.1	134.7	-2.9	-0.8	
United States ^{1,3}	-5.8	-6.4	-17.5	-11.8	1.2	-3.1	106.6	108.2	128.7	132.5	-2.5	-1.1	
Euro Area	-0.5	-0.6	-8.4	-5.9	1.8	-0.9	85.8	84.0	98.1	99.0	-3.0	-1.0	
Germany	1.8	1.5	-5.1	-3.4	3.0	-0.2	61.8	59.6	70.0	69.9	-3.3	-2.3	
France	-2.3	-3.0	-10.6	-7.7	0.2	-1.2	98.1	98.1	115.3	117.6	-3.4	-1.0	
Italy	-2.2	-1.6	-10.9	-7.5	2.1	-1.3	134.4	134.6	157.5	159.7	-4.3	1.4	
Spain ²	-2.5	-2.9	-11.7	-8.2	2.4	-0.7	97.4	95.5	118.2	118.9	-4.9	-2.4	
Japan	-2.6	-3.4	-13.8	-8.6	0.3	-2.2	232.6	234.6	258.7	258.7	-7.5	-5.3	
United Kingdom	-2.3	-2.3	-14.5	-10.6	1.9	-1.4	85.8	85.2	103.3	110.8	-4.8	-0.8	
Canada ³	0.3	0.5	-20.0	-7.8	-0.1	0.9	88.8	86.8	115.7	116.4	1.1	1.5	
Australia	-1.2	-3.8	-10.4	-11.4	-0.3	-1.0	41.7	47.4	63.8	74.8	3.4	4.6	
Korea	2.6	0.4	-3.1	-2.7	0.1	-0.4	40.0	41.9	48.1	53.0	-0.3	0.7	
Emerging Market and Middle Income Economies	-3.8	-4.8	-10.3	-8.6	0.4	0.6	52.3	54.3	63.3	65.3	1.1	0.3	
Excluding MENAP Oil Producers	-4.0	-5.0	-10.3	-8.7	0.5	0.6	54.1	55.9	65.0	67.1	1.3	0.4	
Emerging G20	-4.3	-5.4	-10.9	-9.1	0.4	0.8	53.1	55.4	64.3	66.6	1.5	0.5	
Asia	-4.5	-6.0	-11.1	-10.3	0.3	0.7	54.2	56.7	65.8	69.4	2.1	1.5	
China	-4.7	-6.3	-11.8	-11.0	0.1	0.8	53.7	56.5	65.2	69.4	3.5	2.9	
India	-6.3	-7.4	-11.5	-9.7	1.5	1.2	69.5	73.0	85.5	83.1	-3.9	-6.8	
Indonesia	-1.8	-2.2	-6.2	-6.1	0.1	-0.6	30.4	30.6	38.7	43.1	0.2	1.3	
Europe	0.4	-0.9	-6.6	-4.4	0.6	0.1	29.4	28.7	38.4	38.5	0.6	-0.4	
Russia	2.9	1.9	-4.6	-2.3	0.6	0.3	13.6	13.8	21.0	20.7	2.1	1.7	
Turkey	-3.7	-6.4	-7.4	-7.1	0.5	0.8	30.2	31.7	40.4	40.3	-1.2	-5.2	
Latin America	-5.2	-4.1	-9.8	-4.9	1.3	0.3	69.2	70.0	78.7	75.4	-2.9	-5.5	
Brazil ⁴	-7.0	-5.9	-14.5	-5.9	2.2	0.6	85.6	87.7	95.6	92.1	-5.8	-10.7	
Mexico	-2.2	-2.3	-5.2	-3.4	0.6	0.0	53.6	53.3	63.0	63.0	-2.5	-2.6	
MENAP	-2.9	-3.7	-9.5	-6.8	0.2	0.1	39.9	45.1	53.1	53.5	-0.2	-0.3	
Saudi Arabia	-5.9	-4.5	-11.7	-4.2	-1.1	1.8	19.0	22.8	32.5	32.9	-1.0	-1.5	
South Africa	-4.1	-6.3	-14.2	-12.2	-0.1	-1.0	56.7	62.2	77.7	84.9	-1.2	2.2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3.4	-4.0	-5.7	-5.0	0.5	0.1	42.8	43.3	48.5	48.5	-0.3	-1.1	
Nigeria	-4.3	-4.8	-5.9	-4.7	0.8	0.2	27.7	29.1	34.4	34.3	-0.6	-1.2	
Bangladesh	-4.6	-5.4	-4.7	-6.0	2.1	0.1	34.6	35.7	37.2	39.3	-2.4	-2.6	
Oil Producers	0.2	-0.3	-10.6	-5.5	0.1	0.2	44.1	45.4	59.0	59.0	1.4	1.0	
Memorandum													
World Output (percent)	3.5	2.8	-3.5	5.5	0.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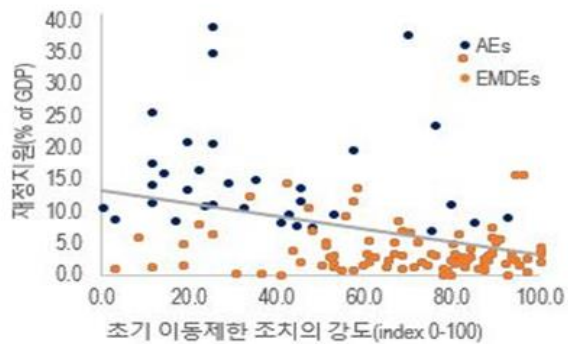
주: IMF(2021) Fiscal Monitor Update

코로나 위기 대응 재정투입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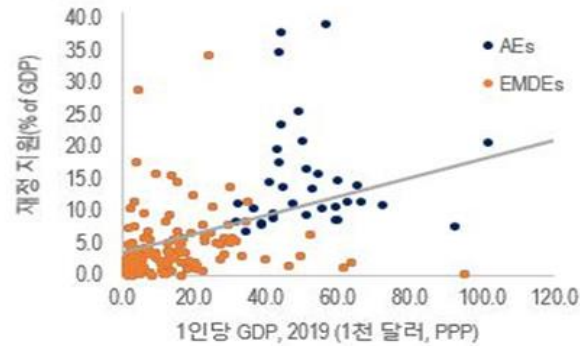
재정투입 결정요인: 1)경제력(1인당 GDP) 2)재정여력(부채비율)과 조달비용(이자율) 3)초기봉쇄강도 4)정치적 요인

〈재정지원 규모와의 상관요인 분석〉 *IMF(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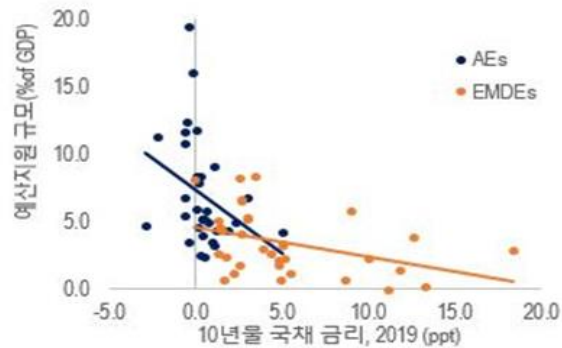
1. 재정지원 규모와 초기 이동제한 조치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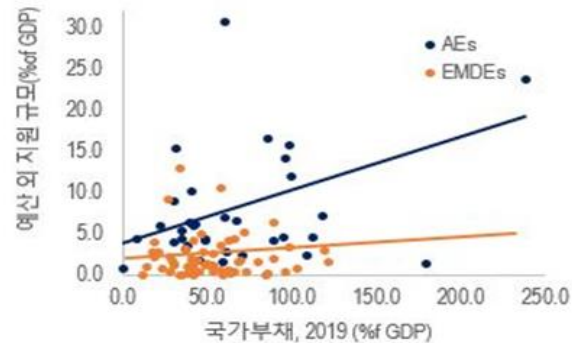
2. 재정지원 규모와 초기 1인당 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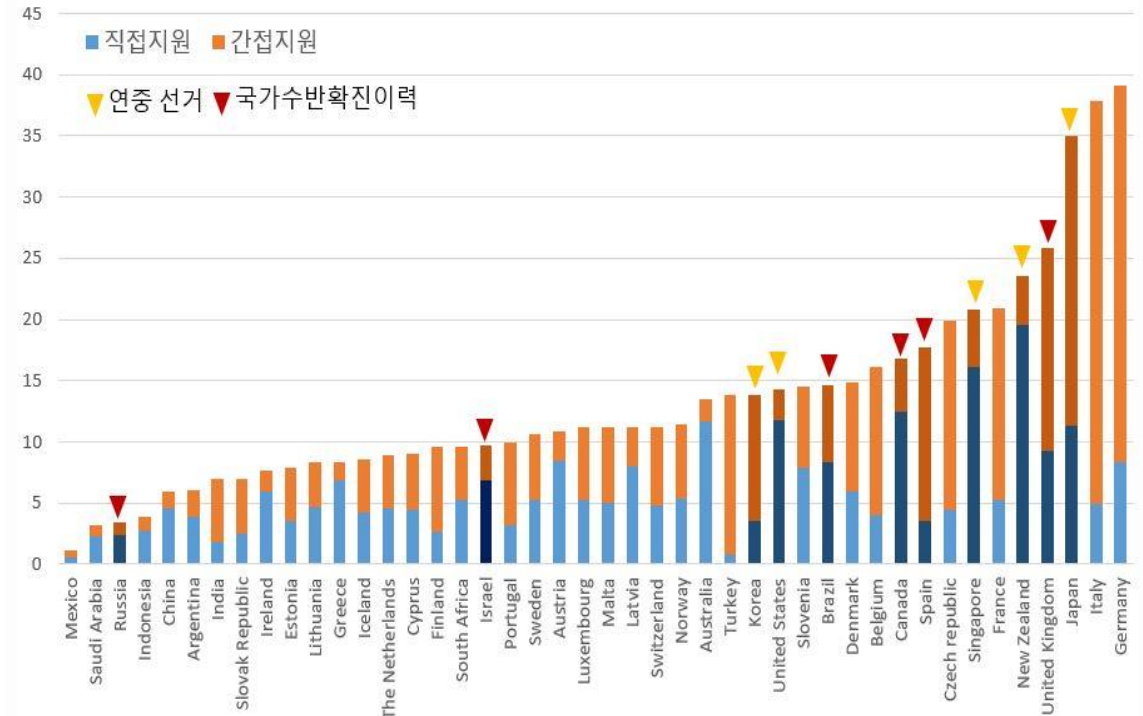
3. 재정지원 규모와 국제 시장금리



4. 재정지원 규모와 초기 국가부채(Public Debt)



〈주요국 재정대응 규모와 정치적 요인〉 *IMF(2020.10)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0.10. AE=Advanced Economies, EMDEs=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초기 이동 제한 조치 강도'는 옥스퍼드대학의 정부지원지수 하위지표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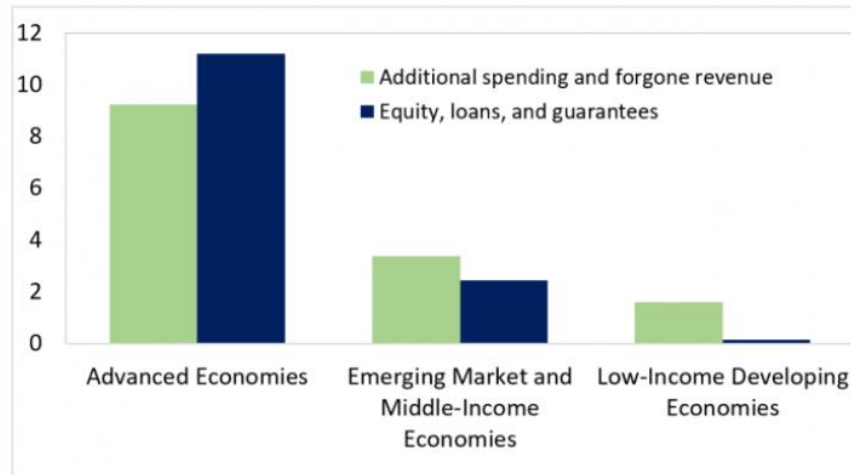
확장재정 가능한 전제조건 = 건전재정

-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의 본질:
증장기적 차원의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제약 하에서,
재정여력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Limited room for maneuver

High debt burdens have hampered the fiscal policy response, especially in emerging market and low-income economies.

(announced measures as of September 11, 2020, in per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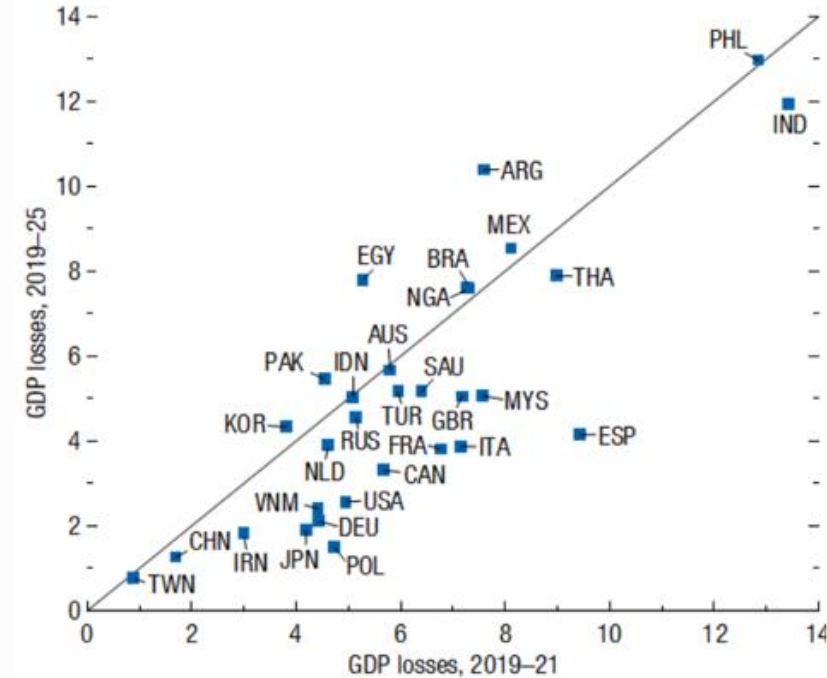


Sources: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The timeframe for the announced measures is country-specific, but the bulk of the measures announced so far are short-term crisis-response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2020-21. Country group averages are weighted by GDP in US dollars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y.

GDP Losses: 2019–21 versus 2019–25

(Percent difference between January 2020 WEO Update and October 2020 WEO projections)

Over the medium term,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will only modestly progress toward the 2020–25 path of economic activity projecte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Source: IMF staff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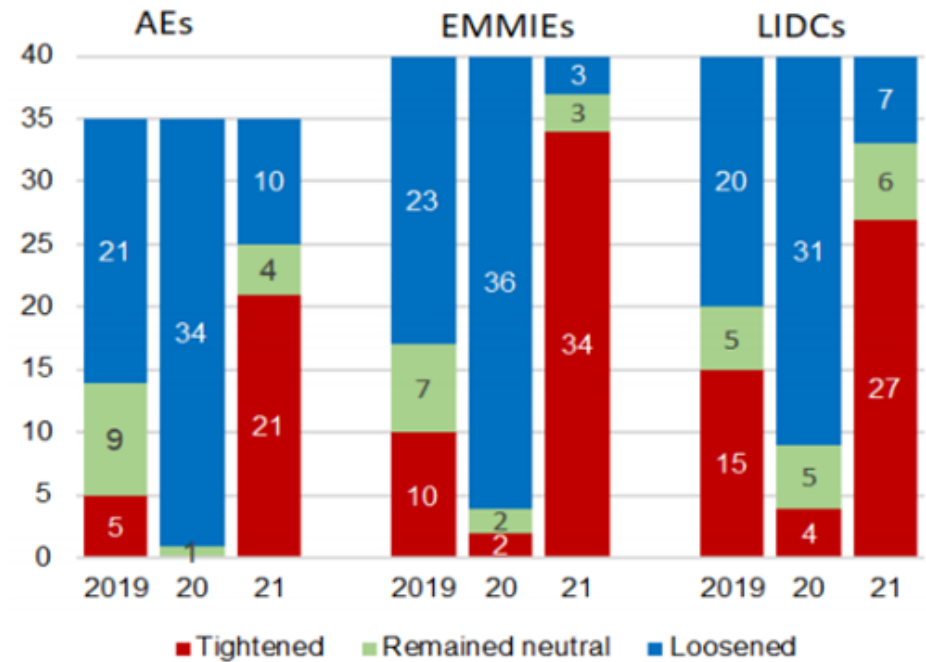
Note: WEO = *World Economic Outlook*. Data labels 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2021년 재정기조 국제비교

2021년 국가별 재정기조

-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0년의 확대재정 이후 2021년에는 대체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다만, 2021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진국의 비율이 신흥경제국 및 저소득개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다분히 재정여력에서의 우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전 세계 10개 선진국 중 하나에 속함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기조: 국가의 수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주: AEs = advanced economies; EMMIEs = emerging market and middle-income economies;
LIDCs =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2021년 재정수지 국제비교

2021년의 우리나라의 2020년 대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개선 정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미약한 수준으로, 재정정상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태

- (세계경제) 경제성장률 개선에 따라 2021년 세계경제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3.3%p 개선(-11.8% → -8.5%), 즉,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짐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0.37%p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
- (한국경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4.5%p 오르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단 0.4%만 개선되어, 성장률 1%p 상승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0.09%p(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하여,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정상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함
- 관리재정수지 기준, 우리나라는 2021년의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폭은 더욱 확대되어, 확장적인 재정기조가 오히려 더욱 강화

경제성장률 대비 재정수지 개선폭: 2020년 vs 2021

구분		2020년	2021년	2020-2021 변화폭
세계	경제성장률	-3.5%	5.5%	9.0%p
	통합재정수지	-11.8%	-8.5%	3.3%p
한국	경제성장률	-1.0%	3.5%	4.5%p
	통합재정수지	-3.1%	-2.7%	0.4%p
	관리재정수지	-6.1%	-6.2%	-0.1%p

국가채무 비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채무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국가채무 국제비교에 이용되는 지표는 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지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42.1%임(D1은 37.6%)
- D2 기준 2019년 OECD 채무비율 평균은 110.0%이나, 이는 가중평균으로, 단순평균은 80%대로 크게 낮아짐
- 우리나라의 D1과 D2 비율의 차이는 약 4.5%p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 황성현(2021)에 의하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 규모가 내부거래로 취급되어 일반정부 부채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만일, GDP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되는 '누락'된 국공채 규모를 포함하여 재계산한 '19년 D2 채무비율은 약 50%
- 이제,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2025년 D1 전망치 58.8%를 D2로 환산하고(+4.5%p)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8%p), 우리나라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년 후 71.3%에 달하여, OECD 채무비율 단순평균(80%)에 근접함

*향후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가 줄어들게 되면, D2 규모는 이를 반영하여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의 상대적 증가 국제비교

채무비율 증가율을 비교하는 상대적 방식의 평가 결과, 각국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의 채무비율에 비례(약 17%)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경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2019년 대비 채무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7% 증가
- 독일도 팬데믹 대응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17.5% 증가
- 선진경제국(17.1%)과 신흥국(16.6) 간 채무비율의 상대적 변화율 거의 차이가 없음, 각국은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입에 의한 재정투입 규모를 종전 채무비율을 약 17% 가량 증가시키는 선에서 결정
- (한국) 2020년 우리나라 채무비율 증가율 역시 14.8%로 국제평균(17%)보다 다소 낮지만, 큰 차이 보이지 않음

팬데믹 전후 일반정부 국가채무(D2) 변화(2019-2020)

채무증가	한국	선진경제국	독일	신흥경제국	세계 평균
변화폭(%p)	6.2	17.9	10.4	9.0	14.1
변화율(%)	14.8	17.1	17.5	16.6	16.9
변화율 배율 (한국 대비)	-	1.15	1.18	1.12	1.14

주: Fiscal Monitor(2021.1)

2021년 경제회복기 채무관리 국제비교

- 경제적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제회복 국면에서 각국은 2020년에 크게 급증한 채무의 추가적인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2%p 내외 수준에서 통제함으로써 채무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임
 - ✓ 2021년 선진경제국의 전년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폭은 약 2.2%p(122.7% → 124.9%)
 - ✓ 신흥경제국들도 2021년 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2.0%p 증가
- 이러한 국제적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4.9%p(48.1% → 53.0%) 증가함으로써, 세계경제 채무비율의 평균 증가폭 1.9%p(97.6% → 99.5%)의 2.5배를 상회
-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이 작았음에도 경기회복기에 채무증가 통제 노력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기 시와 유사한 속도로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여력의 급속한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2014-202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4-2019		2020-2025	
													변화폭	변화율	변화폭	변화율
한국	39.7	40.8	41.2	40.1	40.0	41.9	48.4	52.2	55.8	59.3	62.3	65.0	2.2	5.6	16.6	34.2
G20	111.5	110.8	113.9	111.7	111.6	113.2	135.0	135.5	135.8	136.1	136.3	136.3	1.7	1.5	1.3	1.0
선진국	104.8	104.2	106.8	104.5	104.0	105.3	125.5	125.6	125.6	125.8	125.7	125.5	0.5	0.5	0.0	0.0
신흥경제국	40.3	43.7	46.5	48.1	50.1	52.6	62.2	65.0	67.5	69.2	70.4	71.1	12.3	30.5	8.9	14.3
유로지역	92.8	90.9	90.0	87.6	85.7	84.0	101.1	100.0	98.4	97.0	95.6	94.3	-8.8	-9.5	-6.9	-6.8
저소득개발국	31.5	35.3	37.9	42.4	42.9	43.3	48.8	49.7	49.1	48.4	47.7	46.8	11.8	37.6	-2.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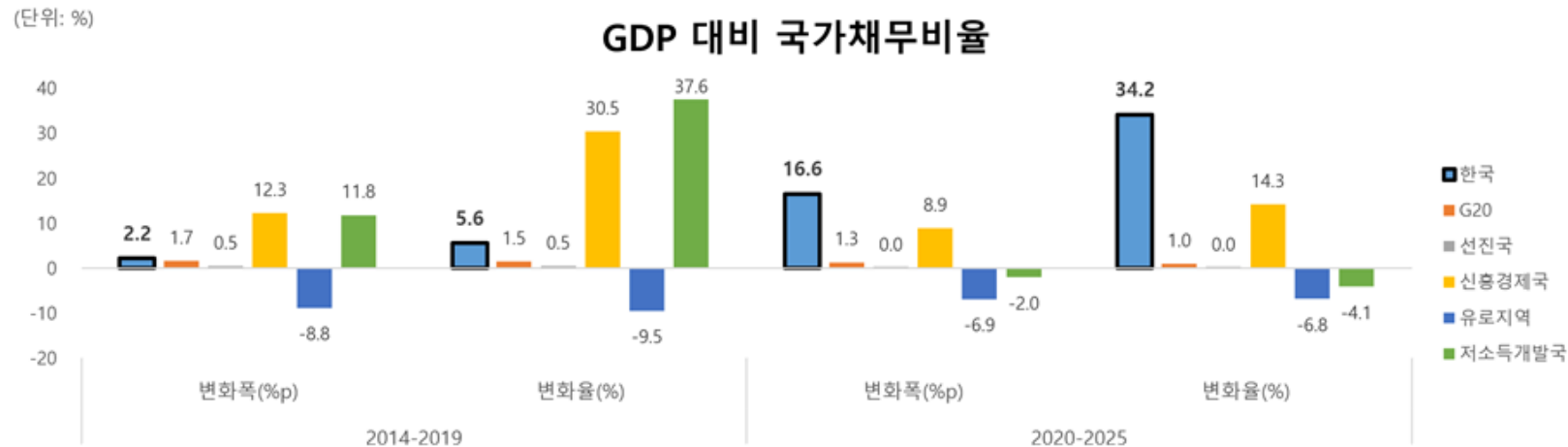
자료: IMF Debt Database(2021)

팬데믹 전후 채무비율 중장기 추이 국제비교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한 일반정부채무(D2)의 중장기 추이 국제비교

- 2014-2019년 기간 우리나라 일반정부 채무비율의 증가율은 5.6%(증가폭 2.2%p)로 신흥경제국과 저소득개발국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2020-2025년 기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의 증가율은 34.2%(증가폭 16.6%p)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등과 비교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 G20 국가의 경우, 일반정부 채무비율 자체가 높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부채가 크게 급등하였으나, 2021년의 경제회복기 이후에는 채무비율 변화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성공적이었던 방역 덕분에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작았던 우리나라만 유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세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의 큰 허점

국가군별 채무비율 변화 비교 2014-2019년 vs 2020-2025년



IV. 재정위험 관리와 재정건전화 정책

사회경제 환경변화: 고령화·저성장·불평등

환경변화 :

세입증가세 감소에도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과 요구 점차 커지고 있음

→ **재정의 삼중고(三重苦)***

- Aging: 대부분 선진국들이 피하기 어려운 경로, 향후 재정여건의 결정적 요인
- Low-Growth Trap: 경제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의 운
- Inequalit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과 격차 확대에 대한 반성,
실제 불평등의 정도만이 아니라, 체감도와 인식도 중요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65세 이상 비중)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2010년	11	23	13.1	15.95	20.6	16.9	18.3
2020년	15.7	29.1	16.8	19	22.4	20.6	20.3
2030년	24.3	31.6	20.3	21.9	27.2	23.6	22.1
2040년	32.3	36.1	21	23.7	30.5	25.8	23.8
2050년	37.4	38.8	21	24.1	31.6	26.2	24.1

자료: OECD.

Post-Covid19 장기 재정전망: 예산정책처(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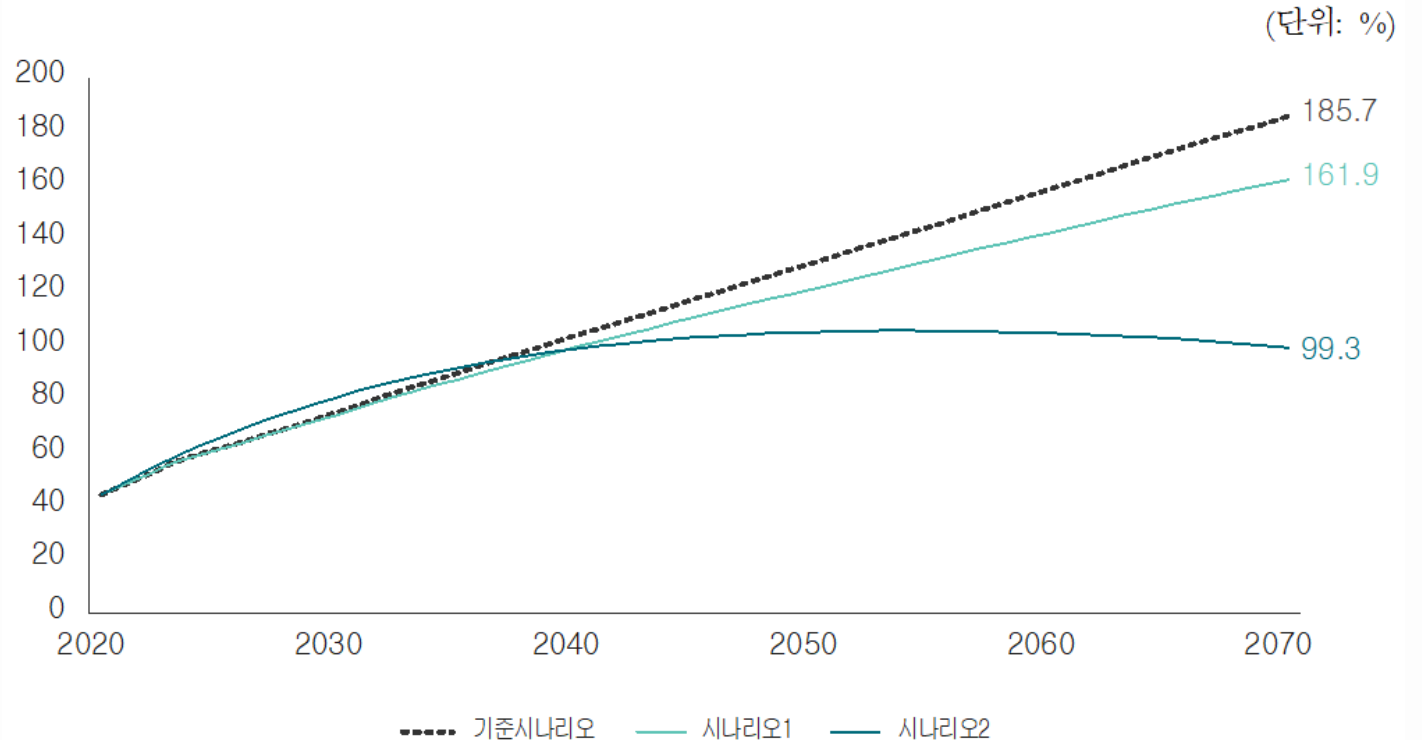
- 현행제도 유지된다는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거의 30%p 상승
(재량지출: 경상성장률 2.2% 증가 가정)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 제안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



재정위험 증가 : 국가신용등급과 Risk Premium

- 내년 부채비율 50% 넘어서 이후, 국가신용 등급이나 전망 하향조정 압력 작용
 - Fitch: AA- stable → AA- negative or A+ positive ?
 - * '20년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사례는 107개국, 총 211건*('20.10.6일 기준) 역대 최다
Fitch: 영국(AA→AA-(부정적), 3.27일), 캐나다(AAA→AA+(안정적), 6.24일) 등급 하향조정
미국(AAA, 안정적→부정적, 7.31일), 일본(A, 안정적→부정적, 7.28일) 전망 하향조정
 - 부채비율 60%부터는 한국이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기존의 인식에 영향
 - EU 재정준칙: 부채비율 60% 상한(다만, 위기중 일시 유예)
 - 부채비율 60%는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critical point!
 - 리스크 프리미엄 = 특정 국채이자율 - 무위험 이자율(미국 또는 독일의 이자율)
 - 이자율의 부채 탄력성으로 IMF(2017)는 단순히 0.04, EC(2018)는 0.03을 가정
- 부채비율이 GDP의 60%를 1%p 초과할 때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3~4bp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

Debt Dynamics

- 부채동학과 장기수렴조건에 의하면, 3.5% 경상성장률 하에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지적자(GDP 대비 4.5%)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서고, 장기적으로 133% 수준으로까지 증가하여,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부채 장기 수렴 조건>

$$\begin{aligned}\lim_{T \rightarrow \infty} D_T &= \lim_{T \rightarrow \infty} \frac{D_0}{(1+g)^T} - \frac{B}{(1+g)^{T-1}g} + \frac{B}{g}(1+g) \\ &= 0 - 0 + \frac{B}{g}(1+g) \\ &= \frac{B}{g}(1+g)\end{aligned}$$

D_t : T기의 국가채무비율, g : 향후 명목 GDP 성장률

B : 향후 재정수지적자 비율, D_0 : 현재의 국가채무비율, Y_0 : 현재의 명목 GDP

재정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 70년대 만성적 재정적자는 고도성장으로 커버; 80년대 재정안정화가 비축한 재정여력으로 외환위기 극복
- 2000년 이후 양입제출 원칙 → 채무비율 목표제 → 대규모 적자 누적 → New Fiscal Rule에 의한 재정통제 필요!!

Before Corona

정부주도 고도성장기 (1980년 이전)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물가불안정·외채누적 요인
- **높은 경제성장률**로 재정 건전성 문제 일부 극복

-정권 말 **증세** 시도:

1972년 체제의 낮은 세 부담
→ 부가가치세 증세 전환 시도
→ 유신체제 전복

시장경제전환기 (1980~ 1999년)

- 재정수지 흑자 노력
재정안정화로 부채 축소

- **양입제출 원칙 확립**

-건전재정에 기반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외환 위기 조기 극복에 성공

경제 자유화와 개방화 (2000~2019년)

- 공적자금 국채전환·지출확대로 수지불균형

적자규모: GDP 3% 미만(2% 내외)

- **국가채무 목표 설정**
(암묵적 지출통제: 경상성장률 이내)

- 정부 초엔 세출조정 시도,
정부 말로 수지균형 이연

*글로벌 경제위기·복지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박)'증세 없는 복지' 기조 견지

→ 담배세 증세 후 정권 탄핵

(문)'서민증세 없는 복지'기조 유지

위해 국가채무 목표 설정 포기

Post-Corona

Welfare State (2020년 이후)

- 코로나 위기로 재정팽창·적자확대·만성적 수지불균형

적자규모: GDP 4%후반

- **재정건전화 + 재정준칙**
증세 vs 세출구조조정

- **국가채무 방치:**

→ 국가채무 비율 급등

(매 10년 동안 30%p ↑)

→ 재정건전성 기반 급속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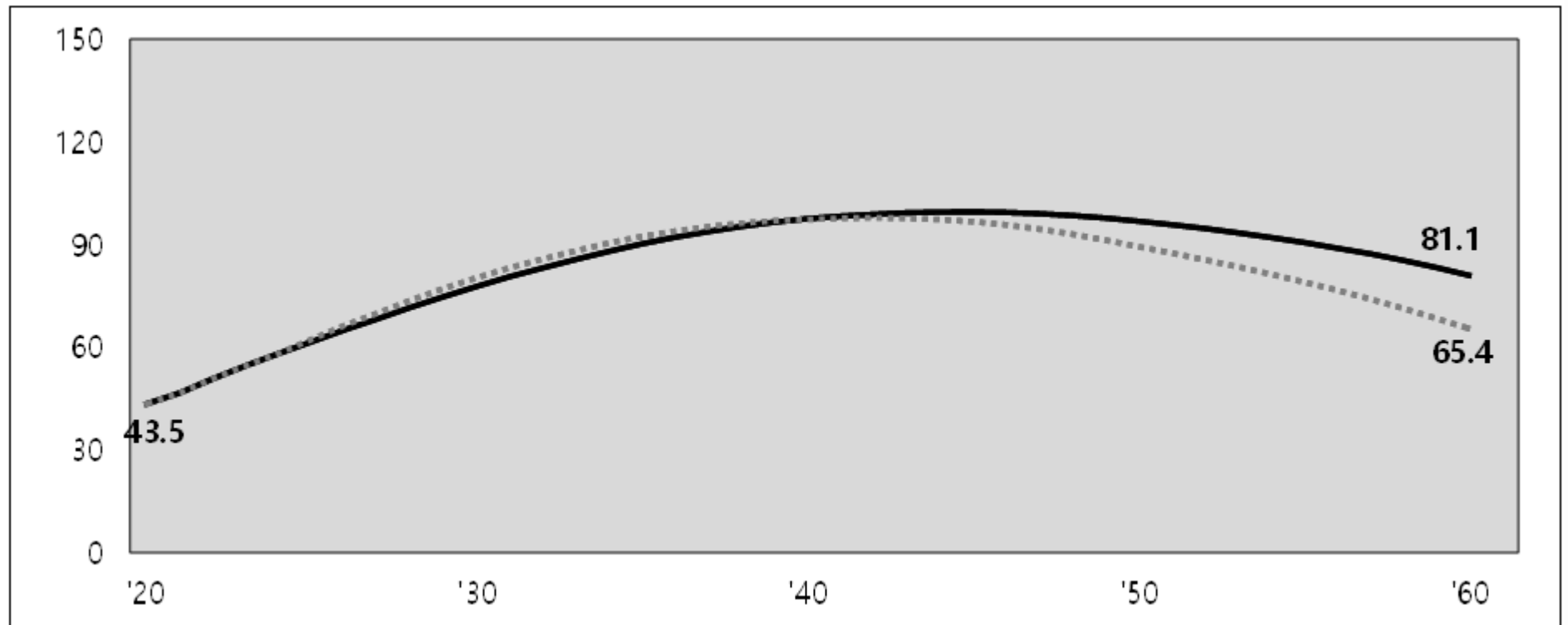
→ 재정관리 실패는 항상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을 역사에서 배워야 함

Post-Corona 재정관리 계획: 기재부(2020.9)

- 무대응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20년 43.9%에서 2045년 99%, 2060년 81.1% 수준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22%p 상승
(총지출: 경상성장율로 증가 가정 → 관리재정적자를 3% 초반에서 통제가정!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
율 추이
(단위: %)



새로운 재정관리 제도: 재정준칙 도입

기재부의 포스트 코로나 재정관리 방안

- '25년 재정준칙 도입: 채무비율 60% + 통합재정수지 3%
 - 기재부의 관리목표 자율조정 권한(현재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시행령 격상)
 - 의회 복지지출 법안 발의 시 Pay-Go 원칙 적용
-
- 시행령의 지위로 의회의 정치적 개입 견제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지위 격상 필요, 가능하다면 준헌법적 지위 부여
 -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필요
 - 독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Pay-Go 원칙 적용** 동시 관장
 - 관리재정수지 4.5% ≡ 통합재정수지 3% 초반:
 - 균형경상성장률 3.5% 가정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장기적으로 130%로 수렴
 - 관리재정수지 3%에서도 채무비율은 약 90%로 수렴
 - 현실적인 목표는 "관리재정적자 비율 평균 2.0~2.5%(상한 3%)" 적절

재정건전화 정책: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

필요한 재정안정화 규모

-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4.5%를 2.0~2.5%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필요
- 40~50조원 규모의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이 필요
-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60~70% 범위에서 통제 가능

“세입확충(20조원) : 지출삭감(20~30조원) plan 하에서,
매년 적자재정 보전 위한 채무 증가는 30~40조원 이내로 통제”

→ 2022년 전체 조세지출 60조원의 1/3이나 종합소득세(20.7조원) 규모의 증세 필요

조세지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22년 국세감면액: '21년 대비 약 3.6조원 증가한 59.5조원 전망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구 분	2020년(실적)	2021년(전망)	2022년(전망)
○ 국세감면액 (A)	529,357억원	559,366억원	595,208억원
○ 국세수입총액 ¹⁾ (B)	3,036,717억원	3,327,157억원	3,588,658억원
○ 국세감면율 [A/(A+B)]	14.8%	14.3%	14.2%
○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²⁾	13.6%	14.3%	14.8%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2022년 기준

< 주요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1	근로장려금 지급 44,82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7,747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1,317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3,630	근로장려금 지급 46,216	근로장려금 지급 48,718
3	연금보험료공제 33,067	연금보험료공제 34,989	연금보험료공제 37,547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7,98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1,91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5,107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34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3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2,017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4,69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6,747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8,621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3,47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4,84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6,588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55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9,52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956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7,88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5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20,436
10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17,76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8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9,705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6,3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6,570	통합투자세액공제 18,152
1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33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15,73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7,425
1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2	통합투자세액공제 13,354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16,834
1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190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2,475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4,883
15	연금계좌세액공제 12,117	연금계좌세액공제 11,860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3,102
16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2,09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1,316	연금계좌세액공제 12,725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788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13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2,109
1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9,891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96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975
19	자녀세액공제 8,87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9,397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0,106
20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8,387	자녀세액공제 8,719	자녀세액공제 9,347
	합계 398,032	합계 418,415	합계 457,669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2	(전체조세지출 대비, %) 74.8	(전체조세지출 대비, %) 76.9

조세 ·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19년 기준)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6.9%)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7 ~ 35%)	집단 III (35 ~ 43%)	집단 IV (43% 이상)	전체
국민부담	26.9	23	32.2	38.9	44.8	34.2
조세부담	20.0	18.0	23.5	27.0	34.4	25.1
1인당 GDP	31,605	32,549	32,972	48,083	47,693	39,143
해당국가		멕시코(16%)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26.8%) 한국	스위스 호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캐나다 슬로바키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45%)	OECD 회원국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조세수입구조 국가비교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6.9%)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7 ~ 34%)	집단 III (35 ~ 42%)	집단 IV (43% 이상)	전체
소득세	4.8(58%)	5.2	7.2	8.9	14.2	8.3
법인세	3.8(127%)	3	3.1	2.9	3.1	3.0
사회보장	6.9(76%)	4.6	8.7	11.9	10.4	9.1
재산과세	3.1(163%)	1.9	1.9	1.8	2.4	1.9
일반소비세	4.3(61%)	4.6	7	7.9	8.4	7.0
개별소비과세	2.7(84%)	2.7	3	3.6	3.6	3.2
국민부담	26.9(79%)	23	32.2	38.9	44.8	34.2
조세부담	20.0(80%)	18	232.5	27	34.4	25.1
1인당 GDP	31,605(81%)	32,549	32,972	48,083	47,693	39,143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세입구조 평가

Tax Mix: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법인과세와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 매우 낮은 상태

Tax Burden: 실효세율에서도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인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평균수준

세입확충 대상 평가 기준

- 효율성: 경제적 왜곡의 정도, 조세효율비용, 성장친화성
- 형평성: 소득재분배 효과
- 외부효과 조정: 사회적 및 개인적 순편익 격차 조정, 피구세(환경세)
- 신장성(세원의 규모)·보편성(과세대상의 범위)